

북한 테러범죄의 변화양상에 따른 대응방안 -김정일 정권 이후 고위층 권력 갈등을 중심으로

변찬호* · 김은정**

〈요 약〉

한국은 지금까지 북한의 테러범죄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었다. 현재 북한정권에 의한 테러 범죄행위 발생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점이고, 김일성 정권의 북한 테러범죄 행위는 통치자금 확보라는 목적 하에 독재로 자행되어 왔다. 이후 김정일·김정은 정권 동안 테러범죄 행위를 살펴보면, 비(非)권력 집단의 목표인 권력쟁취·경제이권 확보 등을 성취하고자 하는 갈등이 원인으로 작용하여 범죄행위로 표출되고 있음이 드러난다.

본 연구는 테러 대책의 궁극적인 목적이 장치 발생할 가능성 높은 위협에 대하여 사전 예측·대비해야 한다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이를 위해 집단 간 권력 갈등이 범죄의 한 요인이 된다고 설명하는 George B. Vold(1958)의 이론을 적용했다. 이에 다양한 북한 테러범죄 원인 중 각 시대별 고위층 권력 갈등으로 인한 테러범죄 행위를 분석하고,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는 향후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북한의 테러범죄 행위는 김정일 정권 이후, 고위층 간 권력 판도가 시대별로 급격히 변화하면서 세력 쟁취와 이권 강탈을 위한 권력 갈등으로 인해 더욱 심화되었다. 북한 고위층의 권력 갈등이 북한 테러범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련된 정보·첩보 수집이 단편적인데다가 미국에 의존하는 등 실제적인 대응이 미약한 실정이다. 게다가 북한 테러범죄에 대한 심각성 및 시급함의 공감도 역시 높지 않아서 체계적인 국제공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공조 방안에 대한 논의조차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최근 DDoS공격·청와대 홈페이지 변조·GPS 교란전파 발사·무인정찰기 침투 등 수 많은 테러범죄 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이 같은 비(非)대칭 테러범죄 행위가 미칠 파문에 비해 그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 북한 테러범죄의 원인을 밝히고 대응하기 위해 휴민트(HUMINT)·테크인트(TECHINT) 등을 통한 고위층 정보 수집을 확대하고, 이를 종합·분석하는 전담부서를 설

* 국제대학교 경호보안학과 교수 (제 1저자)

** 용인대학교 경호학과 교수 (교신저자)

치하는 한편, 탈북자 등 정보원의 보호 및 감독을 통한 포괄적인 수집체제를 확립해야 한다. 그리고 북한 테러와 관련된 국제협력에 적극 동참하여, 국제협약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국제적인 공조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핵·미사일 테러와 함께 한층 정교해지고 첨단화 되어가는 사이버·전자 테러 전문기술에 대비하기 위해 법령 제·개정 및 관련 기구·예산 등 제도적 정비와 기술을 보완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 등 실질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북한, 테러범죄, 고위층, 권력갈등, 테러대응

목 차

- | |
|---|
| I. 서 론
II. 북한의 시대별 테러범죄 양상
III. 북한 테러범죄 대응의 문제점 및 방안
IV. 결 론 |
|---|

I. 서 론

북한이 자행했던 금강산관광객 피격(2008.7.11)과 대청해전(2009.11.10)·천안함 피격(2010.3.26) 및 연평도 포격(2010.11.23.) 등 북한의 테러범죄 행위는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급진적이고 과격하게 이루어졌다. 국제사회의 보호법익과 국제규범을 침해하면서 상식선을 넘는 북한의 테러범죄 행위로 인해 최근 한국은 그 어느 때보다 긴장이 고조되고 있으며, 간혹 긴박한 전운마저 감돌아 일촉즉발의 전쟁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한다. 그래서 북한 테러범죄 행위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를 통해 그 원인에 적합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은 체제 보전과 안정이란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대내적으로 통치자금 확보·세습권력 공고·정치안정 구축을 도모하며, 대외적으로 핵보유국 인정·미국과 평화협정 체결·한국을 하부구조화 하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그 무엇보다도 북한정권에 있어서 통치자금 확보는 목적 달성의 가장 핵심이다. 즉, 1990년 이후 사회주의 국가 붕괴와 함께 경제난을 겪었던 김정일은 위협발언 → 테러범죄 행위 → 대화 → 통치자금 외부 지원이라는 고리를 연결해서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이득을 얻었다. 북한이 정권 유지에 필요한 통치 자금은 첫째, 내부의 경제 활성화를 통해 자체적으로 확보하거나 둘째, 내부의 경제를 강탈¹⁾ 하거나 셋째, 외부자금²⁾ 지원 등을 통해서 마련되었는데, 북한정권이 개혁개방을 하지 않으므로

인해 경제 활성화가 취약한 현 상태에서, 통치자금의 외부유입은 국제외교가 성과를 거두어야만 내부 경제의 강탈을 지연할 수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이러한 통치자금의 외부유입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테러범죄 행위를 통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북한 테러범죄 행위의 가장 큰 원인은 김일성 정권까지만 해도 통치자금의 외부유입을 목적으로 삼은 독재자의 강압적인 지시로부터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김정일·김정은 정권에서 자행되고 있는 북한 테러범죄 행위의 양상을 살펴 볼 때, 독재자의 강압적인 지시가 주를 이루던 과거와는 다른 모습이 나타난다. 그리고 과거와 다른 모습을 보이는 주된 이유는 북한 고위층의 권력 갈등이 북한 테러범죄 행위의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범죄발생의 원인을 정치·경제 요인의 갈등에서 찾으며 집단갈등이론을 주장한 미국의 범죄사회학자 George B. Vold는 『Theoretical Criminology(1958)』에서 사회가 지속되는 한 갈등은 중요한 과정 중 하나이고, 범죄는 권력을 가지지 않은 비권력 집단이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벌이는 투쟁이므로 집단 간 이해관계 대립이 범죄의 한 요인이 된다고 설명한다(Vold, 1958: 204; Vold, Bernard and Snipes, 2000: 236~237). 그의 주장은 경쟁하는 집단 간의 충성심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범죄행위가 주로 이루어진다는 것인데, 북한 고위층의 권력 갈등과 테러범죄 간의 관계 역시 이러한 이론적인 구조를 적용할 수 있다.

북한 고위층의 권력은 김일성 정권에서 주체사상의 노동당, 1995년 초기 김정일 정권에서 선군정치의 선군군부, 2006년 당·군 간 권력 분점 이후 보수공안연합(노동당+공안기구), 김정일의 건강(뇌경색·뇌졸중)이 회복된 2008년 10월 이후 선군통치연합(선군군부+보수공안)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010년 9월 28일 제3차 당대표자 회의 이후 신통치연합(신군부+신주류³⁾), 2012년 7월 11일 당 정치국회의 이후 신주류연합, 2013년 12월 8일 당 정치국회의 이후 최룡해 중심의 비(非)장성택 계열연합세력(최룡해+군부+당 조직부+공안기구), 2014년 4월 26일 당 중앙군사위원회 이후 비(非)장성택 계열연합세력(고영화-이제강-선군군부)으로 바뀌었다. 이들 비(非)장성택

1) 합법적 조세 수입이 아니라 화폐교환조치·외화물수와 화폐발행 급증으로 인한 인플레이 유발 및 군량미·수도미(평양 공급 쌀) 강제 과다 징발 등 주민 재물을 고의적으로 가져오는 것이다.

2) 광물수출·폐쇄특구 운영·노동력 수출·관광 진흥·대외원조 등과 같이 내부 경제의 생산성 증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외부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을 의미한다.

3) 박형중(2012)은 “신주류는 가계(家系)와 민간 당료(빨치산 2세 중심)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이는 과거 군부가 핵심이 되어 중앙당과 연맹한 선군통치연합을 교체한 것이다.” 라 분류했다.

계열연합세력은 2013년 말 장성택-김경희 계열의 신주류연합세력을 몰락시켰고, 자신들을 대신하여 장성택 숙청에 앞장섰던 최용해 마저 총정치국장에서 해임·좌천시켜 김정은 정권에서 권력의 신주류로 확고히 자리 잡았다.⁴⁾

이처럼 북한의 당·군부는 서로 충돌해 왔고, 권력·비권력 집단 간 갈등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특히, 김정일 정권 이후부터 권력이 지도자·당·군 간을 이동하면서 권력 쟁취와 이권 확보를 위해 고위층 간 경쟁적으로 충돌했고, 치열하게 각축하는 등 갈등이 극심했다. 권력을 가진 집단은 비권력 집단에 대해 가혹한 실각·숙청 및 경제 이권 강탈을 가했으며, 이와 같은 권력 갈등과 충성심 충돌 및 이해관계 대립은 비권력 집단으로 하여금 권력쟁취와 이권사업 확보를 위한 테러 범죄행위의 요인이 되고 있다. 최근에는 김정은·로알패밀리·군부·내각과 갈등을 빚어왔던 장성택이 2013년 숙청당했고, 2014년 최용해 마저 권력층에서 밀려난 후, 고영화·당 조직지도부·선군군부 세력이 권력의 신주류로 등극함에 따라 군부 발언권이 더욱 강해졌다. 군부 발언권의 강화는 다른 아닌 테러범죄 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음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독재자가 테러범죄를 지시했던 김일성 시대와 달리, 김정일 정권부터는 북한 테러범죄의 원인이 북한정권 내 고위층⁵⁾ 간의 권력 갈등에 있음을 주목하며 시대별 권력변동에 따라 테러범죄의 변화양상을 살펴보고 그 실질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II. 북한의 시대별 테러범죄 양상

1. 선군정치시대(1995년~2005년)의 테러범죄

북한정권 고위층은 1994년 김일성의 사망 후, 1995년부터 주체사상의 노동당 통치 체제에서 선군정치⁶⁾의 선군군부 체제로 바뀌었다. 이는 당시 김일성 사망 이후 각종 행사에 참가하는 고위층 인사들의 거명 순서에서 군부 출신들이 상위를 차지하고,

4) 최용해에 이은 총정치국장 황병서는 당 조직지도부와 군 고위간부를 내세워 김정은 제1위원장을 후계자로 내정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했던 인물이다(연합뉴스, 2014년 4월 28일).

5) 고위층(상층지도부) 권력 관계란 김정일·김정은과 당·군부·내각·공안기관 간 권력 관계를 말한다.

6) 선군정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무장을 한 군인들만 틀어쥐고 있으면 체제는 지킬 수 있다는 확신 밑에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군대가 우선한다는 것이다(안찬일 외, 2006: 145)” 로 북한의 군사 제일주의를 표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김정일의 군부대 방문이 잦아진 점 역시 군부의 높아진 위상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박재규 외, 1997: 251). 반면에 선군군부와 내각이 국정 주역으로 대두되는 만큼, 노동당의 당(黨) 세력은 현저히 약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개번 맥코맥(Gavan McCormack)은 1993년 12월 이후 노동당중앙위원회의 회의 소집이 알려지지 않았음을 예로 들며 Military First Politics라는 선군정책으로 김정일이 김일성과는 다른 체제 구축을 이루어냈고 국가의 중력 중심이 당에서 군으로 이전되었음을 언급한 바 있다(박성준, 2006: 113).

〈표 1〉 선군정치시대의 주요 북한 테러범죄

연월일	주요 테러 범죄행위	테러양상	남북 지도자	시대별 경향
1999년 6월 15일	제1차 연평해전	무력	김대중·김정일	북한, 남·북한 간 우호적 분위기 속 테러범죄 자행
2002년 6월29일	제2차 연평해전	무력	김대중·김정일	
2002년	제2차 북핵 위기	핵	김대중·김정일	

1996년에 발생한 용성사건과 심화조사건은 1995~1996년 북한의 대홍수로 인한 아사·기근 등 고난의 행군 시절 배고픔에 지친 인민들의 원성이 날로 높아진 상황에서, 정권유지에 위기감을 느낀 김정일이 민심을 안정시키고 권력을 공고화하기 위해 김일성 측근인 당·내각 간부들을 6.25동란 간첩죄로 조작하여 25,000여명을 체포·숙청한 것이었다. 군부 위력에 놀려 있었던 당(黨)의 위상은 이러한 사건들로 약화되었고, 그럴수록 당과 군부 간의 갈등은 더욱 깊어져만 갔다. 이런 갈등 상황 속에서 선군정치시대의 북한 테러범죄 행위는 제1·2차 연평해전에서 보이듯이 군부의 위력을 보여주기 위한 군부 주도의 무력중심이었다. 선군정치시대에 한국은 ‘6.29 선언’의 후속사업으로 개성공단 조성과 함께 금강산관광사업을 추진하는 등 햇볕 및 화해정책을 구사하며 적극적인 대북 교류에 힘을 기울였지만, 북한정권은 체제보전과 안정을 위해 지속적인 외부 통치자금 유입을 목적으로 핵무기를 앞세우면서 끊임 없이 테러범죄 행위를 자행했던 것이다. 김정일의 적극적인 선군 군부 지원에 따라 권력에서 소외된 당 간부들은 군부의 무력 테러범죄 행위에 반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때 발생한 제1·2차 연평해전은 김정일과 선군 군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했다고 할 수 있다. 당시 김정일이 군부에 막강한 힘을 실어 주었고, 실제로 군부와 함께 무력 테러범죄를 직접 관장한 사실은 황장엽의 증언에서도 확인된다.⁷⁾

2. 보수공안연합세력시대⁸⁾ (2006년~2008년 10월)의 테러범죄

2002년 선군군부 내부에서는 김정일 처 고영희(김정은 생모)를 ‘위대한 어머니’로 칭송했다. 이는 군부를 중심으로 한 권력 세력이 후계자를 김정일에 이은 세습으로 일단락 지을 의도로서 선제 조치를 취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김정일은 후계자 문제 까지 개입한 선군 군부의 힘에 두려움을 느껴 2005년 말부터 서서히 당(黨)에 권력 분점(分占)을 추진했고, 장성택의 당(黨) 복귀를 전후하여 고위층 주요 인사 교체와 정책 변화를 진행했다. 이에 등장한 장성택 중심의 당 행정부 등 보수옹호파와 공안 기관은 반개혁 공세를 시작했다. 보수공안연합세력의 신(新)경제노선은 ‘반개혁+군부경제사업 축소+국가사업 확대’였다. 보수공안연합세력은 군부 경제사업을 축소하고 당이 관장하는 대외원조와 폐쇄 특구형 외화사업을 통해 획득한 외부 자원을 투입, 반개혁 불모상태인 내부경제를 지탱해 권력 주도권과 민심안정을 유지하도록 하고, 이를 토대로 강성대국과 후계체제를 성공시키고자 했다. 보수공안연합세력은 김정일이 ‘시장은 비(非)사회주의의 서식장’이란 ‘8.26 비사방침’을 하달하자(2007년 8월 26일), 2007년 9월부터 남북경협과 관련한 내각 관료 인물들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가혹한 숙청을 시작했다. 이로 인해 내각의 위상이 격하되고 개혁 관료들이 실각한데다 개혁정책 대부분이 취소되었으며, 장마당 시장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었다. 또한 ‘군부대 명칭으로 된 무역 회사와 국가가 정식으로 인정하지 않은 무역회사들을 일제 재정리하라.’(2007년 12월 23일), “모든 군부대의 군부 출장소와 군부 외화별이 회사를 없애야 한다.”(2008년 2월 1일)라는 당(黨) 방침을 하달했고, 2008년 3월 신의주지역 군부무역회사에 대해 집중 검열을 대대적으로 실시하며, 군부에 치중된 권력을 견제했다.⁹⁾

2008년에는 건강(뇌경색·뇌졸중) 문제로 김정일의 정상 활동에 지장이 생기자 보수공안세력은 힘을 얻게 되었고, 선군정치시대에 막강한 권력을 누렸던 선군군부는 보수공안세력에 의해 집중적인 검열 및 숙청으로 탄압을 당하면서 불만을 품었다.

7) 제1·2차 연평해전을 ‘군부 자체적으로 진행했다’ 라는 여론에 대해 황장엽은 “대포 한발이 아니라 총 한방을 쏘는 데도 김정일 재가가 필요한 군부에서 재가도 받지 않은 채 포 사격을 명령할 사람은 있을 수 없다.” 라며 일축했다(대한민국상이군경회, 2012년 6월 28일).

8) 박형중(2010)은 “2006년부터 보수공안연합세력이 정책 주도권을 행사하는 시기이다. 여기서 보수공안연합 세력이란 중앙당의 보수옹호파와 인민보안성(부)과 국가안전보위부와 같은 공안기관의 연합을 의미한다.” 라며 2006년 이후를 보수공안연합세력시대로 분류했다.

9) 좋은 벗들, “군부 산하 외화별이 회사 축소”, 오늘의 북한 소식, 제112호, 2008년 2월 22일 게재.

따라서 보수공안세력시대에는 군부에 의한 미사일 발사와 제1차 핵실험이 있었으며, 돌발적인 금강산 관광객 피격 테러범죄 행위가 연이어 일어났다. 2006년에 권력이 당·군으로 분점화되기 시작했지만, 사실상 보수공안세력에게 권력이 기울어진 상태였다. 보수공안세력은 2007년 무역회사 통폐합·축소 및 광물수출 금지 등 대표적인 중소단위 군부 무역회사를 중심으로 각종 억제 조치를 강력하게 추진했고, 무역일원화 방침을 내세우며 지방에서도 군부 외화벌이사업을 견제하는데 이어 2008년 3월부터 신의주 등 북·중 국경지역에 대해서는 가혹한 중앙 집중 검열을 실시했다. 또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 한국으로부터 외부원조 협조가 거부되자 정세 오류 판단에 대한 책임을 통일전선부 등 대남부서 당 간부에게 전가해서 정치감옥소·교화소로 보냈고, 일부는 숙청하기도 했다.

〈표 2〉 보수공안연합세력시대의 북한 테러범죄

연월일	주요 테러 범죄행위	테러 양상	남북지도자	시대별 경향
2006년 7월 5일	미사일 7기 발사	미사일	노무현·김정일	남·북한, 화해 분위기 이후 긴장 고조 점증
2006년 10월 25일	1차 핵실험	핵	노무현·김정일	
2008년 7월 11일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피격	돌발적 무력	이명박·김정일	
2008년	미사일 3회 발사	미사일	이명박·김정일	

군부·내각은 자신들의 경제이익·외화벌이 사업의 이해관계가 크게 침해당하고 있다는 인식이 팽배한 상태였다. 이로 인해 군부 내에서는 극도의 피로감에 젖어 있었고, 이러한 군부 내부의 영향은 일선 군부대 장병들에게 전파되어 점차 확산되었다. 2008년에는 남북 간 긴장감이 확대된 가운데 금강산 관광객 피격 테러범죄가 발생했다. 금강산 관광 사업은 외화벌이를 목적으로 한 김정일의 숙원 사업이었다. 보수공안연합세력의 가혹한 검열·조사에 대한 군부의 불만이 내부적으로 팽배해 있었기 때문에, 급기야 일선 군 병사에 의한 돌발적인 금강산 관광객 피격이라는 테러 범죄 행위로 표출되었던 것이다. 김정일은 중단된 금강산관광사업 재개를 위해 사과 하길 원했으나 군부 반발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금강산 관광객 피격 테러 범죄 행위에 대한 북한의 사과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금강산관광 사업 역시 재개되지 못했다. 이러한 점을 통해서 볼 때, 금강산 관광객 피격 테러범죄 행위는 단순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보수공안연합세력과의 권력 갈등을 겪고 있었던 군부에 의해 자

행된 돌발적인 테러범죄 행위로 볼 수 있는 사건이었다.

3. 선군통치연합세력시대¹⁰⁾ (2008년 10월~2010년 9월)의 테러범죄

2006년부터 보수공안연합세력이 추진했던 군부 억제 목적의 집중 검열과 반개혁 정책이 만족할 만큼 실현되지 못한 상태에서 김정일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자 북한 고위층의 권력 상황은 급격히 바뀌었다. 이에 2008년 10월 이후 선군군부와 보수공안연합세력은 후계 체계와 대내외 문제점 등을 해결하기 위해 연합할 필요성을 체감하고 선군통치연합세력을 결성했다.¹¹⁾ 선군통치연합세력은 2009년 국방위원회를 명실상부한 핵심정책 결정의 최고기관으로 구성하여 2009년 1월부터 김정은을 후계자로 전면에 내세우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했다. 국방위원회가 보수공안연합세력과 군부로 확대 개편되었지만 현실적으로 단속하는 쪽은 보수공안연합세력이었고 단속을 당하는 대상은 군부였다. 2009년 4월 군부 무역기관에 대한 국방위원장 명의의 단속 명령이 하달된 것에서 이러한 점이 드러난다. 군부가 직면한 재정난이 해결되지 못한 상태에서 일방적인 군부 무역기관과 외화벌이사업에 대한 과잉 단속이 확대되자, 선군군부는 보수공안연합세력에 대해 불만을 가졌다. 또한 2009년 2~4월에는 선군 군부와 신(新) 군부 사이의 세력 판도가 재조정되었다. 당시 김정일에 의해 취해진 군 인사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총참모장 이영호·정찰총국장¹²⁾ 김영철 등 신 군부 주요 인물들의 등장을 통한 세대교체로 볼 수 있다.¹³⁾ 이러한 점은 2009년 대의원 선거에서 전체적인 군부 인사들의 약진이 두드러진 가운데, 조명록·이을설·김영춘 등 핵심 선군 군부 인사들의 재 선출과 더불어 김영철·이정부·안민홍 등 신진 세력들까지 폭넓게 대의원으로 진입하였음에서 나타난다(통일부 통일교육원, 2010: 57).

10) 박형중(2010)은 “북한은 2008.10부터 대내외적으로 강경 공세 전략을 강화하고 후계체계 구축을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보수공안연합 세력과 군부가 정책영역과 권력 지분을 조정하여 새로운 진용을 구성했다.” 라며 2008년 10월 이후를 선군통치연합세력시대로 분류했다.

11) 이러한 통치연합 형식의 권력체제에 대해 Svolik(2012: 5)는 통치연합이란 “독재자를 지지하며 독재자와 함께 정권의 생존을 보장하는데 충분한 권력을 가진 한 패거리의 개인들” 이라고 정의한다.

12) 정찰총국은 당 35호실·작전부와 인민무력부 정찰국이 합병한 총참모부 산하 대남테러 총괄본부이다.

13) 평양방위사령관 이영호가 김정일의 절대적 신임을 받아서 2009년 2월 총참모장에 취임했다. 2006년 이후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북측 대표단장을 맡았던 김영철은 2009년 4월 정찰총국장에 임명되었다.

보수공안연합세력은 2009년 11월 30일 화폐 개혁을 단행했는데, 그 목적은 강력한 처방을 통해 군부 무역기관의 외화벌이를 재편하기 위한 것으로 ① 무역기관과 외화벌이 활동을 장악하지 못하고는 장마당 경제를 장악할 수 없다는 점 ② 외화벌이를 축소하고 무역활동을 제한해야만 군부의 사회정치적 영향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 등이었다. 그러나 화폐개혁은 보수공안연합세력의 의도와 달리 쌀값을 200~300배로 폭등시켜 민심을 극도로 불안하게 했고, 김정일이 2010년 ‘5.26조치’를 통해 시장 개방과 군부무역회사 활동을 재허용하는 정책으로 선회하는 등 실패를 하면서 군부에 대응할 빌미를 제공했던 것이다.

〈표 3〉 선군통치연합세력시대의 북한 테러범죄

연월일	주요 테러 범죄행위	테러 양상	남북지도자	시대별 경향
2009년 4월 5일	광명성 2호 발사	미사일		남·북한, 대치 국면으로 긴장 분위기 최고조
2009년 5월 25일	2차 핵실험	핵		
2009년 7월 7일	사이버(DDoS) 테러	전문기술	이명박·김정일	
2009년 11월 10일	대청해전	무력		
2009년 11월	사이버(작게 해킹) 테러	전문기술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피격	무력	이명박·김정일	
2010년 8월 23일~25일	전자(GPS교란전파) 테러	전문기술		

선군통치연합세력시대에 북한정권은 더욱 향상된 장거리미사일과 2차 핵실험을 전 세계에 과시했고, 서해 NLL에서 대청해전과 천안함 피격테러 범죄행위를 연이어 자행해 한국의 해군 46명이 전사했으며, 정찰총국 주도의 사이버·전자라는 전문기술 테러 범죄행위를 표면화시켰다. 이 시기 군부와 보수공안세력이 선군통치연합세력으로 결성했지만, 실질적인 권력 주도권은 여전히 보수공안연합세력에 있었다. 이에 선군군부는 김정일에게 제1·2차 연평해전 패배에 대한 보복을 주장했고, 천안함 피격 테러범죄 행위를 위해 김정일로부터 승인을 얻어서 감행했다. 천안함 피격이 군부에 의해 주도되었다는 사실은 대청해전 이후 대장에서 상장으로 강등되었던 총참모부 김명국이 2010년 4월 14일 대장으로 복귀했고, 정명도 서해해군사령관이 상장에서 대장으로 진급했으며, 김정일이 4월 25일 인민군창건 78돌을 맞아 정찰총국을 방문하여 김영철의 영접을 받았다는 점에서 나타난다.

특히 이 시기는 사이버·전자 테러범죄가 본격적으로 등장했다. 북한정권은 인민무력부·총참모부·당(黨)통전부로 흩어져 사이버 테러범죄 행위를 감행했고, 2009년

4월 출범한 정찰총국을 중심으로 사이버·전자 테러를 치밀하게 준비했다. 그렇듯 정찰총국 주도로 자행된 군 인터넷 망 침투(2009년 3월 5일), DDoS 대란(2009년 7월 7일)¹⁴⁾, 작계(作計)5027 핵심내용 해킹(2009년 11월) 사이버 테러는 한국을 큰 혼란에 빠뜨렸다. 2010년 8월 23일~25일에 발생한 전자테러 등 전문기술 테러범죄 행위는 기존의 선군 군부가 자행한 무력 테러범죄 행위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범죄 양상을 펼쳐서 군부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했다. 군부 중심으로 자행된 테러범죄 행위가 연이어 성공하면서 군부 위상이 높아진 결과, 해외 불법 외화벌이를 담당했던 당 작전부 산하 무기수출 주력 기업인 청송연합을 강탈하는 등 군부는 경제이권사업을 재 확보했다. 또한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김정일과 군부는 2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도 강행했는데, 이는 남북(南北)·북미(北米) 간 대결구조에서 대미협상 수단과 군사력을 과시할 필요가 있었고, 내부 권력의 우위를 확보함으로써 김정일의 후계구도 구축에 앞장서서 보수공안연합세력의 전횡에 반대하려던 군부의 초조함이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4. 신통치연합세력시대¹⁵⁾ (2010년 9월~2012년 7월)의 테러범죄

2010년 9월 28일 개최된 제3차 당대표자회의는 새 정치세력이 진용을 갖추고 이를 대내외에 공포하는 행사였다. 이 당대표자회의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김정일이 김정은을 공식 후계자로 선정했고, 가계(家系)와 민간 당료에게 힘을 실어 주어 당(黨)의로의 권력 축(Pivot to the Party)을 이동하도록 한 점이었다. 공식적으로 퇴장한 세력은 선군군부였고, 새롭게 등장한 세력은 신군부와 신주류 양 세력이 결합한 신통치연합세력이었다. 2011년 12월 19일 김정일 사망 후부터 2012년 4월 11일 제4차 당대표자회의 기간까지 신군부와 민간당료는 크게 충돌했고, 양 집단은 어느 세력이 김정은을 포섭하느냐에 따라 새 시대의 핵심이 결정되기 때문에 김정은을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했다. 김정은을 등에 업은 신주류의 권력 다지기는 2012년 4월 11일 제4차 당대표자회의와 4월 13일 최고인민회의 제5차 회의를 거쳐 확실한 윤곽을 드러냈다. 신주류는 양(兩) 대회를 계기로 당·군·공안기구의

14) “(국감) 북의 대남 사이버테러, 디도스 등 총 6회”, 이데일리, 2013년 10월 15일 게재.

15) 박형중(2011a)은 “2010년 9월 당대표자회의는 새로운 정치 세력이 진용을 갖추고, 이를 대내외에 공표하는 자축 행사였다. …새롭게 등장한 권력 연합은 (김정일+김정은+장성택과 민간당료+신군부)의 네 축으로 구성되었다.”라며 2010년 9월 이후를 신통치연합세력시대로 구분했다.

주요 핵심 지위에 장성택 계열의 인물들을 포진시켰고, 그 결과 신통치연합세력으로 확대되었다. 신통치연합세력은 전통적으로 군인이 맡았던 총정치국장에 군부의 반발을 무릅쓰고 황해도당 비서인 최룡해를 임명했고, 인민무력부장에 총정치국 제1부 국장 김정각, 국가안전보위부장에 총정치국 조직국장 김원홍, 인민보안부장에 이명수 등 장성택 계열을 임명했다. 이로써 신통치연합세력은 정치적으로 군부에 대한 장악과 통제를 가능하게 할 기본적인 포석을 마련했다. 권력 장악에 핵심적인 국가수장까지 모두 장성택 계열이라는 점에서 2012년 4월의 권력 지형 재편은 김정은 정권 강화를 명분으로 한 장성택 주도의 권력 재편이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09년 7·7 DDoS 대란에 이어 20개월 만에 발생한 2011년 3·4 DDoS 공격은 대규모 사이버 테러였고, 이어 4월 12일 농협 전산망 DDoS 공격도 금융 사이버 테러범죄였다. 이처럼 사이버·전자 테러범죄는 경찰총국을 중심으로 치밀하게 준비된 전문적인 범죄양상을 보였다. 북한은 NLL 해상에서 표류어선에 탑승한 북한 주민 31명의 전원 송환을 요구하면서,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겠다. 가능한 수단이 무엇인지 모두에게 즉각 보여주겠다(북한 적십자중앙회, 2011년 3월 5일).”라는 위협적인 발언을 한 후 2011년 3월 6일에 전자테러를 자행했다.

〈표 4〉 신통치연합세력시대의 북한 테러범죄 행위

연월일	주요 테러 범죄행위	테러 양상	남북 지도자	시대별 경향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 포격	무력	이명박·김정일	국제사회, 북한 핵·미사일테러에 대해 국제 공조 하 강경 대처 조치
2011년 3월 3일	GPS 교란전파 발사	사이버 전문기술	이명박·김정일	
2011년 3월 4일	DDoS 공격			
2011년 3월 6일	GPS 교란전파 발사			
2011년 4월 12일	농협 사이버테러			
2012년 4월 13일	ICBM 시험 발사	미사일	이명박·김정은	
2012년 4월 28일~5월 13일	GPS 교란전파 발사	전문기술		
2012년 6월 9일	중앙일보 사이버테러	사이버		

신통치연합세력시대에는 가공할 연평도 포격 테러범죄 행위가 발생했고, 전문기술 테러범죄 행위도 더욱 정밀하게 진행되었다. 신주류와 신군부는 2011년 12월 19일의 김정일 사망 전까지 각각 역할을 분담하며 협조체제를 구축했으나, 김정일 사망 이후에는 김정은을 포섭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충돌하면서 치열하게 각축하는 가

운데 갈등을 빚기도 했다. 양 집단 간의 권력 갈등은 연평도 포격테러를 비롯하여 사이버·전자 테러범죄 행위로 이어졌다. 연평도 포격 테러범죄 행위에서 나타나듯이 신통치연합세력시대에 발생한 테러범죄 행위들은 과격하고 무모하며 잔인한 양상을 띠었다. 연평도 포격 테러범죄 행위는 북한 군부의 철저한 계획 아래 실시되었는데, 이는 “김정은의 이름으로 ‘2010년 10월 초 적의 도발 행위에 언제라도 반격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라.’란 지령이 군 간부들에게 하달되었다.”고 보도한 일본 아사히신문 기사에서 알 수 있다.¹⁶⁾ 이런 점을 볼 때, 연평도 포격 테러범죄 행위는 사전에 계획되었던 테러범죄였으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한 것이었다.¹⁷⁾ 그리고 북한에서 권력 기관에 무역허가증(와크)이 배정되는 원칙을 보면, 군부와 정찰총국이 관장하는 와크의 규모가 천안함 피격·연평도 포격·사이버·전자 테러범죄 행위 이후에 급증했다. 특히, “군부 무역회사가 수출원천인 광물자원을 싹쓸이 한다.”는 말이 떠돌 정도로 군부 무역활동이 재활성화 된 점은 이를 반영하는 것이다.

5. 신주류연합세력시대¹⁸⁾ (2012년 7월 15일~2013년 12월 8일)의 테러범죄

신주류연합세력은 권력 공고화를 바탕으로 군부 재편 및 약화 작업에 착수했으며, 권력 강화를 위해 군부가 저항하지 않도록 철저히 정치적으로 제압하면서 이권사업을 과감히 이관·삭감했다. 김정은으로의 권력이동은 제3차 당 대표자회의(2010년 9월 28일)에서 시작되어 제4차 당대표자회의(2012년 4월 11일)와 제5차 최고인민회의(2012년 4월 13일)를 통해 당·정·군의 최고직위에 추대되었으며, 2012년 7월 15일 당(黨) 정치국회의에서 전격 결정된 총참모장 이영호 해임 및 7월 18일 김정은의 공화국 원수 등극 발표로 최종 마무리되었다(통일부 통일교육원, 2013: 54~57). 장성택

16) “김정은, 북한군에 공격태세 갖춰라 지령”, 쿠키뉴스, 2010년 12월 1일.

17) 군부가 타격 지점을 연평도로 잡은 이유는 서해 NLL에 북한이 보유한 서해안 포에서 타격하기에 가장 적절한 지점으로 파급력의 효과가 높고 육지에 비해 확전 가능성이 적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군부는 김정일·김정은의 지시를 받고 공격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호국훈장을 계기로 한 포사격을 구실로 포격을 감행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연평도 포격 직전 북한 미그-23기 5대가 서해 5도 인근에서 초계 비행을 했던 사실에서 알 수 있다.

18) 박형중(2012)은 “김정은 시대 통치연합은 우여곡절을 거쳐 신군부가 아니라 <가계진영+민간당료>를 주축으로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 4월 15일까지 새로운 통치연합이 진용을 갖추었다. 김정은 시대 신주류는 <김정은+김경희+장성택+최룡해+기타 공간간부 및 민간당료>로 구성되었다.”라며 2012년 4월 15일부터 신주류연합세력의 등장을 언급했다.

·최룡해·이영호는 김정은 후계 구도의 정착을 위해 김정일로부터 각기 다른 역할을 부여받았는데, 이들은 김정일이 생전에 작성한 후계 구도의 청사진인 당(黨)·군(軍)의 양 대 세력을 구현할 주축이었다. 김정일은 생전에 김정은 후계 체제의 공고화를 위해 장성택으로 하여금 당과 행정 계통을, 군 실세인 이영호를 중용해 군(軍)의 견제 임무를 부여했다. 그러나 김정은은 권력을 관리할 스스로의 기반이 부족했다. 결국 당 정치국 회의에서 결정된 이영호 실각은 김정일 사망 후, 김정은 후계 체제의 실세간 권력지형 재편과 아울러 고위층 권력 갈등을 본격적으로 표면화하였다.

김정일 사망 이후 신주류연합세력의 권력 공고화 작업은 군부 내 갈등을 활용하여 군부를 분할·통치할 수 있도록 군부 집단을 무력화하고, 신 군부를 포섭하며 일부는 배제하여 분열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다. 당 정치국회의는 이러한 신주류연합세력의 계획에 따라 이영호를 전격 해임했고, 이후 7월 16일 총참모장에 장성택 계열인 현영철을 임명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이영호의 실각은 고위층 권력 갈등의 종식이 아닌 중요한 분기점으로서 신주류연합세력의 신군부 탄압을 위한 첫 신호탄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신주류연합세력은 이영호를 전격 제거하여 최대 권력 집단이 되었고, 이들은 군부가 독점하던 각종 이권사업을 당 행정부와 체육위원회로 이관시켜 대중(對中) 무역과 합영 사업을 독차지했다. 이에 대해 군부는 신주류연합세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했으며, 경제이권 사업을 강제적으로 이관·삭감 당해야만 했다. 그리고 총참모장 이영호의 실각 이후, 군부 약화를 목적으로 한 강도 높은 군부 재편작업이 진행되었다. 이에 2012년 8월 이후에서 2013년 중반까지 군부의 핵심 보직이 빈번히 교체되고 군 장성들의 잦은 강등(8명)이 발생했으며, 2013년 상반기에는 70대의 선군 군부가 전원 교체되었다. 또한 2013년 2월에는 당(黨)생활지도소조가 전군에 파견되어 군 내부의 외화별이 관련 이권 남용을 핵심 의제로 하는 전면적인 감찰이 진행되었다. 이로 인해 각 지방 군부대뿐만 아니라 총참모부·인민무력부·총정치국 내부의 외화별이 관련 파벌과 족벌이 징계를 당했으며 상당수의 고위 장교가 교체되기에 이르렀다. 특히 현영철 총참모장을 비롯한 주요 장령들은 외화별이 이권사업 남용 및 개인 비리로 징계를 받았다.

〈표 5〉 신주류연합세력시대의 북한 테러범죄 행위

연월일	주요 테러 범죄행위	테러 양상	남북 지도자	시대별 경향
2012년 12월 12일	ICBM 시험 발사	미사일	이명박·김정은	남·북한, 지도자 교체 이후 상호 관망 및 대처 분위기 지속
2013년 2월 12일	제3차 핵실험	핵 남북교류 사이버	박근혜·김정은	
2013년 3월 20일	사이버테러			
2013년 4월 8일	개성공단 잠정 중단			
2013년 6월 25일	사이버테러			

신주류연합세력에 의한 군부무역회사와 외화벌이 활동이 위기에 처하자, 군부는 경제이권의 재(再) 확보와 신분 안정을 위해 급기야 김정은을 설득하여 테러범죄를 강행했다. 따라서 신주류연합세력시대에는 2012년 12월 12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가 성공했고, 2013년 2월 12일 3차 핵실험을 진행했다. 북한이 수년간 준비한 ICBM 시험발사에 대해 UN안보리는 대북 제재안 제2087호를 결의(2013.1.23.)했고, 3차 핵실험은 UN대북 제재안 제2094호 채택 등 국제사회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2013년 3월 20일에는 KBS·신한은행 등 방송·금융 6개사 전산망을 마비시키는 테러범죄 행위와 6월 25일의 청와대 등 주요 기관 홈페이지를 변조하는 사이버 테러범죄 행위¹⁹⁾도 자행했다.

6. 비(非)장성택계열연합세력시대(2013년 12월 8일~현재)의 테러범죄

비(非)장성택계열연합세력은 권력 쟁취와 이권사업을 재탈환하기 위해 장성택과 김정은·로알패밀리·내각 간 갈등, 로알 패밀리·장성택 간 갈등, 장성택·내각 간 갈등, 당 조직부·행정부 간 갈등을 최대한 활용했다. 이들 세력은 우선적으로 총정 치국장 최용해를 이용해 권력 2인자였던 장성택을 제거하는데 앞장서도록 했다. 최용해 역시 자신이 권력 2인자가 되고자 하는 권력욕에 취중해서 장성택을 제거하고자 했다. 최용해는 2010년 권력 복귀 이후에 김정일로부터 군부 감시와 통제조정 역할을 부여받아 군부 최고 수장의 역할을 겸했지만, 경쟁자인 장성택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당 조직지도부와 군부가 필요했다.

김정은은 2012년 1월 1일에 어로작업을 중단시키며 수산·석탄 사업의 강화방안

19) “(국감) 북의 대남 사이버테러, 디도스 등 총 6회”, 이데일리, 2013년 10월 15일.

을 하달했다. 전통적으로 군부가 장악했던 수산·석탄사업을 이관 받은 장성택의 합영투자위원회는 이로 인해 막대한 이권을 장악했다. 2013년에 군부대를 시찰하던 김정은은 군인들의 불량한 영양상태를 확인한 후, 군부에게 설득되어 어업 관할권을 군에 회귀시키기로 결심했다. 2013년 10월에 김정은의 지시를 받은 군인들이 출동했지만 장성택 부하들은 “허락 없이 줄 수 없다.”고 하는 과정에서 총격전이 있었다.²⁰⁾ 또한 2013년 석탄 부족으로 화력발전소가 중단되어 비료 생산에 차질을 빚자, 박봉주 내각 총리는 수출 중인 석탄을 북한 내부로 돌리기 위해 김정은에게 간청했다. 김정은은 장성택에게 석탄수출 감축을 지시했으나, 장성택은 ‘중국과 수출 약속’을 이유로 거부했다. 김정은은 장성택이 어업·석탄 사업 지시를 이행하지 않자, 장성택의 측근인 당(黨) 행정부 제1부장 이용하와 부부장 장수길을 11월 15일 공개 처형하여 장성택을 굴복시켰고, 이후 숙청까지 감행했다. 당(黨) 조직부는 전 당원들과 간부들의 정치적 동향을 감시하는 역할은 물론, 고위층 인사 결정 및 핵심기관에 대해서도 막강한 권한을 가졌다. 그러나 이러한 당(黨) 조직부의 권한은 장성택이 당(黨) 행정부장으로 취임하면서 상당 부분 행정부로 이관되었다. 조직부는 장성택의 위세에 대응하지 못하여 불만을 가진 상태였고, 군부와 당 조직부 등 최용해를 중심으로 한 비(非)장성택계열연합세력은 2013년 12월 8일에 장성택을 당 정치국회의에서 출당·제명했으며, 12월 12일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소에서 국가전복 혐의로 전격 숙청했다. 그리고 권력 2인자인 최용해마저도 2014년 4월 26일에 총정치국장에서 해임되고 당 근로단체비서로 좌천되었다.

북한 고위층의 권력은 고영화-당 조직지도부와 선군군부 중심의 비(非)장성택계열연합세력으로 옮겨졌다. 김정은·로열패밀리와 장성택 계열 간 갈등, 친중파(親中派) 장성택·자주파(自主派) 최룡해 계열 간 갈등, 신주류 연합세력과 비(非)장성택 계열의 연합세력 간 갈등, 최룡해와 당 조직지도부-선군군부 계열 간 권력 갈등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었으며, 총참모장 이영호 실각과 장성택 숙청 및 최용해의 좌천은 북한 고위층의 권력 투쟁과 갈등의 단면을 여과 없이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이처럼 북한 고위층 간 권력 갈등의 불씨는 계속 이어질 것이며,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이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거나 당·군·내각·공안기관의 세력을 조정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예견하지 못한 테러범죄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20) “김정은-장성택, 어업권 놓고 총격전”, TV조선, 2013년 12월 26일.

친중파이자 온건파인 장성택이 숙청되었고, 장성택의 숙청 이후 권력 2인자였던 최용해마저 좌천됨으로 인해서 김정은과 당조직지도부-선군군부가 내부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핵·미사일, 사이버·전자, 요인 암살·폭파·납치 및 무인정찰기 등의 다양한 테러범죄 행위를 할 수 있으며, 대청해전·천안함 피격·연평도 포격에서 나타나듯이 무력 테러범죄 행위는 그 어느 때 보다도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특히, 1·2·3차 핵실험 및 ICBM 시험발사로 기술력이 월등히 향상된 상태에서 제4차 핵실험과 초경량 ICBM 시험발사가 예상되며,²¹⁾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주도해왔던 장성택이 숙청되고 최용해마저 좌천된 만큼, 향후 북한이 경제협력에 주력하기 보다는 핵무기·미사일 개발에 더욱 힘을 쏟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Ⅲ. 북한 테러범죄 대응의 문제점 및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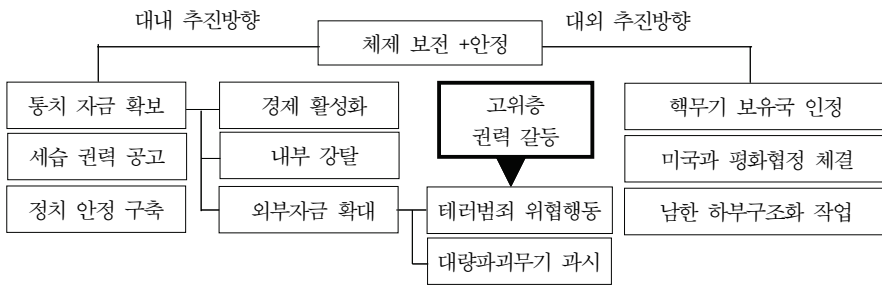
1. 북한 고위층의 정보 수집

1) 문제점

북한 고위층의 권력관계에 대한 내막이 최초로 알려진 것은 고위직탈북자 이한영의 탈북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김정일의 전처 성혜림(사망)의 조카 이한영(본명: 이일남)은 1978년에 모스크바 외국어대를 전공한 엘리트 출신으로, 탈북 후에 언론을 통해 북한 고위층의 실상을 신랄하게 비판했는데, 그는 스위스 제네바에 입국한 뒤에 1982년 9월 서방으로 탈출했다가 1982년 10월 한국으로 망명하였다(성혜림, 2000: 520). 이한영 이후로 북한 고위층에 대한 정보는 성혜림과 황장엽을 통해서도 많이 알려졌다. 이밖에도 고위직 탈북자 조명철, 강명도 등과 40여개 탈북자 단체들이 북한의 권력 내부와 연계된 동향을 전해 주고 있지만 아직 여러 채널을 통한 정보 수집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즉, <그림1>과 같은 대내외적 상황 속에서 북한 고위층의 권력 갈등과 테러범죄 간의 밀접한 관계에도 불구하고 북한 고위층의

21) 미국의 한 소식통은 “동창리는 ‘은하 3호’ 보다 큰 로켓을 수용하도록 발사대 확장이 이뤄진 상태다. 11월에는 이곳에서 이동식 발사대용 시설이 건설 중이라는 사실이 포착됐다. 같은 달 말에는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동해 발사장)에서도 미사일 조립동, 발사대, 통제센터 보수공사가 이뤄진 사실이 확인됐다”고 언급했다(“군, 미사일-핵도발 가능성 예의 주시”, 동아일보, 2013년 12월 13일).

정보 수집 체제가 미흡하다는 것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출처: 박형중(2010, 2011a, 2011b, 2012), 조민(2012)의 내용을 재정리

〈그림 1〉 북한의 대내외 정치 상황에 따른 권력 갈등과 테러범죄의 관계

북한 고위층의 권력 갈등이 테러범죄의 중요한 단서로 작용함에도 불구하고, 정보 수집 자체에 한계가 있다 보니 정보를 선별하고 처리하는 과정의 중요성도 반영되지 못하여 더욱 고전하게 된다. 이러한 점은 실제로 학계와 대북관련 전문 연구기관들의 북한 고위층 동향 분석이 학자별 또는 연구기관별 정보 수집 능력에 따라 각기 다른 내용을 제공하고 있음에서 드러난다. 이렇게 고위직 탈북자와 탈북 단체들을 통해 수집되는 정보를 집결하고, 제출된 자료를 종합하여 분석을 전담하는 정부 내 책임 부서 역시도 아직 구성되어 있지 않다. 이런 부서가 없는 실정이므로 TV·신문 등 언론을 통해 각기 다른 의견이 제시될 뿐이고, 이를 통해 정보 자체의 진위 여부 또는 해석의 혼란이 가중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덧붙여 북한 고위층과 친분이 있는 해외 인사들을 통하여 정부에서 정보 수집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점도 미흡한 정보 수집 체계의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들 수 있다.

2) 대응 방안

북한 고위층의 동향을 수집하기 위해 학계와 일선 대북 관련기관 전문가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하고, 북한 내부 연계망과 함께 고위층 동향에 밝은 고위직 탈북자·단체를 통해 정보 수집에 주목해야 한다. 정부의 대북관련 기관은 휴민트(HUMINT: Human+Intelligence, 인간정보)와 테킨트(TECHINT: Technical+Intelligence, 기술정보)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한 가지 사례로 전직 미국 NBA 프

로농구선수 데니스 로드먼만큼 김정은과 긴 시간을 함께 보낸 미국인이 없으며, 미국 케이블방송채널(HBO)을 통해 방영한 다큐멘터리에서 김정은과 로드먼이 함께 있는 장면은 김정은의 개인생활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정보였다. 이러한 로드먼의 방북을 통해 김계관 전(前) 6자회담 수석대표가 김정은의 측근이란 사실을 알게 되는 등 고위층의 권력 파악에 도움을 얻을 수 있었다. 따라서 넓게는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접근이 용이한 다른 국가들을 통해서 북한의 내부 권력에 대한 접근을 취하고, 좁게는 직접 고위층과 접촉이 가능한 해외인물들(미국농구선수 로드먼·김정은 전속 일본 요리사 후지모토 겐지·봉화진료소 파견 프랑스 의뢰진 등)을 통해 북한 고위층의 동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고위직 탈북자 이한영 피살 테러와 황장엽 협박 테러를 경험한 만큼 정보원의 보호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각 언론 매체에서 보도되었듯이 현재까지도 박상학 자유운동연합대표 등에 대한 협박 테러범죄 행위가 끊이지 않음을 통하여 고위층 탈북자 또는 북한 정보 수집과 관련된 인물들의 경호경비 강화를 위해 신변보호 담당 보안경찰관의 인원을 증가시켜 범죄를 사전에 차단시켜야 할 것이다. 고위직 탈북자들도 스스로 의심이 가는 탈북자들을 다각적으로 살펴야 하고 낯선 사람이나 지인·후원자도 경계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교육을 병행해야 한다.

2. 북한 테러범죄 대응의 국제 공조

1) 문제점

북한 테러범죄의 문제는 한국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를 요하는 국제사회의 질서를 흐리게 하는 중대한 사안이기도 하다. 국제사회에서 북한 테러범죄의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국가로 미국을 들 수 있는데, 제스퍼 배커(Jasper Becker)는 2004년 자신의 저서 *Rogue Regime-Kim Jong Il and The Looming Threat of North Korea*에서 자유세계의 이념과 이익에 적개심을 표명하는 북한을 ‘불량국가(Rogue State)’로 규정지었다. 그는 미국이 국무성을 통해 1979년부터 테러 지원 국가들의 명부를 작성하고 매년 연방규제법(Code of Federal Regulation)에 등재시켜 관리하는데 1988년에 북한이 포함되었고, 9.11 테러 이후에는 북한·이라크·이란으로 축소되었다가 결국 북한만이 남게 되었음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북한 테러범죄의 위험성을 강하게 경고하였다(김구섭·권영근 역, 2005: 6~10). 물론 2008년 북미 간 핵

프로그램 검증 합의 이후, 미국은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을 제외했으며 2013년에도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헤럴드경제, 2014). 이는 미국 등 국가에서 북한의 테러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비해 테러범죄 대응 상의 중요함이나 시급함에 대해서는 중점을 두지 않았다는 사례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대북 제재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지만,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북한의 테러범죄를 막기 위한 문제 해결의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직접적으로 나서거나 눈에 띄는 국제 공조의 역할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도 드러난다.

이제까지 <표6>과 같은 북한의 권력 변동이 있었고, 수반되는 권력 갈등이 원인으로 작용되어 앞서 언급한 시대별 테러범죄가 발생했음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는 북한 고위층의 권력 변동에 집중함으로써 테러범죄 대응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북한 정세의 변화 가능성을 타진하고 이를 분석해야 함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현재 북한 테러범죄에 실질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주요 국가들과 국제기구 간 정보 교류 및 대북 제재를 위한 체계적인 국제 공조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구체적인 공조 방안에 대한 논의조차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실질적인 국제 공조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자체가 미흡하지는 않은지 그 기본적인 문제부터 다시금 점검해야 하겠다.

<표 6> 북한정권 고위층의 권력 변동

기간 \ 내용	주요 세력 및 시대	세부 권력층	지도자
1945년 8월~1994년	노동당	주체사상	김일성
1995년~2005년	선군정치	1995년~2000년: 선군군부	김정일
		2000년~2005년 12월: 내각과 개혁개방	
2006년~2008년 10월	보수공안연합	당 보수옹호파 + 공안기구	
2008년 10월~2010년 9월	선군통치연합	선군군부 + 보수공안	
2010년 9월~2012년 7월	신통치연합	신군부 + 신주류	
		2010년 9월~2011년 12월: 협조	
2011년 12월~2012년 7월	신통치연합	2011년 12월~2012년 7월: 경쟁	
		2012년 7월~2013년 12월 8일	신주류연합
2013년 12월 8일~현재	비(非)장성택계열연합	최룡해 + 군부 + 공안기구 + 내각 고영희 + 당 조직지도부 + 선군군부	김정은

2) 대응 방안

미국 부시대통령의 재임 당시,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을 역임하는 등 미국외교정책에 크게 기여한 리처드 하스(Richard N. Haass)는 테러활동을 지원하는 국가를 반대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인식 자체가 국제적으로 지지받는다라고 해서, 테러리즘에 대한 대처에도 보편적인 합의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류라고 설명한다. 그는 이제까지 미국이 테러범죄 국가들에 대해 정치·경제적 제재의 필요성을 국제사회에서 지지해줄 것으로 요구했으나, 대다수 국제사회가 제재에 동참하지 않았음을 언급했다. 그런 측면에서 그는 향후 반테러를 위한 국제협력의 가능성에 대해 긍정하며 테러지원에 대한 반대외사를 합의한 국제협약을 성문화하고 서약해야 함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장성민 역, 2005: 74~76).

한국 정부는 북한의 테러범죄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만큼 이러한 대안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겠다. 더욱이 최근 북한 테러범죄 행위가 과격하고 치밀하게 전환되고 있는 현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국제 사회와 긴밀한 협력 하에 주변 국가 및 관계기관 간의 네트워크를 통한 구체적이면서도 직접적인 사전 예방책이 필요한 시점임을 인식한다면 그 노력의 시급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이에 북한 테러와 관련된 국제 협력에 적극 동참해야 하고 국제협약을 이끌어낼 있도록 직접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 북한 테러범죄 행위가 군사 영역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상기하며 경제·외교·문화·스포츠 등 포괄적 측면의 국제 관계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3. 북한의 사이버·전자 테러

1) 문제점

2009년 7.7 DDoS, 2011년 3.4 DDoS, 2012년 4월 농협전산망 마비, 2013년 6.25 청와대 홈페이지 변조 사건 등으로 한국 사회는 사이버 대란에 대한 두려움이 높아졌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 측에서 이러한 사이버 테러가 북한의 소행이라는 결론을 발표한 적도 있지만, 아직까지 국민적인 관심은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열린북한방송(2011)에 따르면, 북한은 사이버 테러 요원의 양성을 위해 크게 3단계에 걸친 해커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1단계는 금성 제2고등중학교에서 담당

하며 2단계는 전문가 수준의 교육으로 북한이과대학 컴퓨터 전문학부 등의 대학에서 담당하고, 마지막 3단계는 실전응용 교육기관인 중앙당 및 인민무력부 산하의 해커 양성소에서 진행한다고 하는데, 해커로 성장할 수 없다는 판단이 되면 보안 유지를 위해 상급학교로의 진급을 누락시킬 정도로 전문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북한의 사이버 관련 요원이 급속히 증대되어 현재 6,000명 규모에 이르렀다는 점에 관해서도 최근에 보도된 바 있다(이투데이, 2014년 2월 13일).

〈표 7〉 각 시대별 북한 테러범죄 행위의 주요 내용 및 특징

시대	내용	무력 테러	전문기술 테러	핵·미사일 테러	특징
선군군부 (1995년~ 2005년)		1차 연평 (1999년 6월 15일) 2차 연평 (2002년 6월 29일)		2차 북핵 위기 (2002년~2005년)	무력
보수공안연합 (2006년~ 2008년 10월)		금강산관광객 피격 (2008년 7월 11일)		미사일 7기 발사 (2006년 7월 4일) 제1차 핵 실험 (2006년 10월 25일)	핵· 미사일, 돌발적 무력
선군통치연합 (2008년 10월~ 2010년 9월)		대청해전 (2009년 11월10일) 천안함 피격 (2010년 3월 26일)	사이버 테러 (2009년 7월 7일) 전자 테러 (2010년 8월 23일~25일)	미사일 발사 (2009년 4월 5일) 2차 핵 실험 (2009년 5월 25일)	무력· 전문기술 시작
신통치연합 (2010년 9월~ 2012년 7월)		연평도 포격 (2010년 11월 23일)	전자테러(2011년 3월 3일) 사이버테러(2011년 3월 4일) 전자테러(2011년 3월 6일) 사이버테러(2011년 4월 12일) 전자테러(2011년 4월 28일) 사이버테러(2012년 6월 4일)	ICBM 시험발사 (2012년 4월 13일, 실패)	전문기술 본격
신주류연합 (2012년 7월~)			사이버테러 (2013년3월 20일, 6월 25일)	ICBM 발사 (2012년 12월 12일) 3차 핵실험 (2013년 2월 12일)	핵· 전문기술 병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사이버·전자 테러가 한국 사회에 미칠 심각한 파급력은 아직까지 깊이 있게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하태경(2013: 5)은 북한에 의해 농협전산망이 파괴되었다는 것을 제대로 믿지 않으려 한다는 점을 들며, 한국 국민들의 대북 사이버 안보에 대한 불감증 수준의 심각성을 지적하였다. 그는 사이

버 세계에서 북한의 고립이 더욱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북한이 더욱 진보된 사이버 테러를 실시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기도 했다. 이처럼 북한의 사이버·전자 테러는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지만, 이를 막기 위한 법·제도적 보완은 물론, 국민들의 관심조차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 무인정찰기 테러처럼 정찰총국을 중심으로 과거와 다른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사이버·전자·생화학 등 비(非) 대칭 테러범죄 행위가 실행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대비책은 제시되고 있지 못하다. 그럼에도 전 세계적으로 IT와 관련한 첨단기술력은 놀라운 속도로 향상되고 있으며, 인터넷 장비와 소프트웨어의 급속한 발전으로 사이버·전자 테러의 공격기법이 더욱 다양화되고 정교화 되는 추세에 있다. 따라서 북한이 인터넷 공간을 활용하여 사이버·전자 테러범죄 행위를 강화할 것임은 북한 테러범죄의 특징이 나타나는 <표 7>을 통해서 예측할 수 있다.

2) 대응 방안

한국은 사이버·전자 테러 관련법의 제·개정을 조속히 실행하며 무인정찰기·생화학 등 비(非)대칭 테러 대비는 물론이고, 정부요인·고위직탈북자를 대상으로 한 암살·폭파·납치테러와 관련된 경호경비태세를 강화하는 실질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최근 최기남(2013: 349~350)의 「북한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한 국가지도부 안전대책에 관한 연구」처럼 국가 기관 및 정부 요인에 집중될 수 있는 사이버·전자 테러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정책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의 사이버·전자 테러범죄 행위를 제대로 분석 및 이해하지 못하여 나타날 수 있는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IT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담팀의 정확한 분석을 기반으로 하여 북한 사이버·전자 테러범죄 행위의 차단에 필요한 북한의 사이버 공작 전술과 범행 체계 및 행태에 대한 분석이 실행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북한 사이버 테러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첫째, 사이버·전자 테러범죄와 관련한 법 제·개정 및 관련 기구·예산 편성 등 제도적인 정비를 실행해야 한다. 현재 한국에는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 제267호)만 있고 법령이 없다. 훈령은 관계기관 간 협조와 통제를 위한 것일 뿐이고, 위반 시 법적인 규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라도 「(가칭)국가사이버안보법」을 제정하고 관련 규제 조항을 보완하여 시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이버 상 선전선동행위·사이버 간첩교신 등 사이버·전자 테러범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현행 국가보안법 내에 사이버·전자 테러범죄 조항을 개정할 필요

가 있고, 정보통신망법·통신비밀보호법 등의 개정도 요구된다. 둘째, 사이버·전자 테러범죄 행위와 관련한 전문 인력 양성 및 기술 개발이다. 첨단화되고 있는 북한의 사이버·전자 테러범죄 기술을 철저히 대비 및 차단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양성이 시급하다. 특히 간첩교신 기법으로 활용되고 있는 스테가노그래피(Steganography)에 대한 대응 기법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하며, 사이버·전자 테러범죄의 수사를 위한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s)기법의 개발·인터넷 추적 기술·암호 복호화 기술 등의 기술 정예화도 필요하다.

IV. 결 론

북한 정권은 현재 대내외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 오바마 2기 정부는 대북 강경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후원국인 중국마저 북한 비핵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한국과의 대화와 협상을 추진함으로써 북·중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다. 천안함 피격 테러범죄 이후에 ‘5.14 조치’로 한국 측 지원이 끊기는 등 남북 교류가 중단되면서 경제난도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에 지금까지 북한정권의 행위들을 토대로 볼 때, 내부 체제보전에 있어 국제사회 혼란과 통치자금 조달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써 테러범죄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김정일의 본격적인 권력승계 작업이 이루어진 1980년대 이후부터 북한의 테러범죄 행위가 극심해졌고, 한국도 1982년 대통령 훈령 제47조 국가대테러활동지침 이후부터 현재까지 대테러 대응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북한 테러범죄에 대해서 실질적인 대응방안이 마련되지 못했으며,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테러 대책의 궁극적인 목적이 현재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방안이 아니라, 장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위협에 대하여 미리 예측 및 대비해야 한다는데 초점을 맞추었고, 이를 통해 북한 테러범죄 행위의 원인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김일성 시대에 북한의 고위층은 수십 년간 주체사상의 노동당 중심이었다. 그 이후 1995년 김정일 정권 초기에는 선군군부를 중심으로 한 고위층이 형성되었지만, 2006년 보수공안연합을 시작으로 2008년 10월 선군통치연합, 2010년 9월 신통치연합, 2012년 7월 신주류연합, 2013년 12월 비(非)장성택계열연합 등으로 최근 10여 년

간 급격한 세력변화가 이루어졌다. 이 같은 세력변화에 따른 테러범죄의 시대별 양상을 보면, 1995년 이후 김정일의 적극적인 군부 지원에 의해 나타난 제1·2차 연평해전은 군부의 위력을 보여주기 위해 선군 군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한 것이었다. 2006년 이후 보수공안연합은 군부의 무역사업과 외화벌이에 대해 검열·조사를 실시하면서 과감한 숙청을 실행했는데, 이 시기 발생한 금강산 관광객 피격은 보수공안의 압박에 따른 군부의 무력 테러범죄였다. 2008년 10월 이후 선군통치연합은 군부의 중요성과 역할을 부각하기 위해 광명성 2호 장거리미사일 발사, 2차 핵실험과 대청해전 및 천안함 피격 등의 테러범죄를 자행했다. 2010년 9월 이후 신통치연합은 신군부와 신주류 간의 극심한 경쟁이 있었고, 신군부는 과거 선군 군부와 달리 사이버·전자 테러 등 전문화된 테러범죄를 행했다. 2012년 7월 이후 신주류연합의 ICBM 시험발사, 3차 핵실험, 청와대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 테러 및 무인정찰기 침투 등은 김정일이 스스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면서 당·군·내각·공안기관의 세력을 견제하고 조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최근 신주류로 등장한 비(非)장성택계열연합세력은 장성택 숙청, 최용해 좌천 등으로 극심한 권력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상태이므로 북한의 예상치 못한 비대칭 테러범죄가 나타날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 고위층의 세력 변화에 따른 권력 갈등과 테러범죄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이제 그 원인에 맞는 실질적인 대응방안 마련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 고위층에 대한 정보 수집 체제를 강화하고, 북한 테러범죄 대응의 국제적인 공조를 확립하며, 기존의 무력 테러에서 더 나아가 전문기술 테러 등으로 한층 복잡해진 북한의 사이버·전자 테러의 실질적인 대응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평화통일 기반구축을 위한 3대 제안(1. 인도적 문제 해결 2. 남북한 공동 인프라 구축 3. 남북 동질성 회복)인 독일 ‘드레스덴 선언’에 따른 ‘통일대박론’에 힘써임으로 인해서 최근 북한 테러범죄의 경계에 소홀하지 않았는지 다시 한 번 숙고하며, 북한 고위층의 권력변동에 의해 테러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지금이야 말로 국민적인 안보의식 강화에 총체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시점이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박재규 외(1997). 북한 이해의 길라잡이, 서울: 법문사
- 박형중 (2010). 김정일, 군과 당, 그리고 김정은 Online Series CO 10-12, 통일연구원
- 박형중 (2012). 김정은 통치 1년과 신주류의 권력 공고화 프로젝트 추진, Online Series CO 12-43, 통일연구원
- 박형중 (2011a). 2010.9.28 당대표자회의 재평가, Online Series CO 11-25, 통일연구원
- 박형중 (2011b). 김정일 방중과 '2005년형' 생존 전략의 위기, Online Series CO 11-18, 통일연구원
- 성혜령 (2000). 등나무집, 서울: 지식나라
- 안찬일 외 (2006). 10년 후의 북한, 경기: 도서출판 인간사랑
- 조 민 (2012). 평양의 7월 드라마와 김정은 체제의 향방, Online Series CO 12-30, 통일연구원
- 최기남 (2013). 북한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한 국가지도부 안전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지 37권
-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0). 북한 이해 2010. 통일부
-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3). 북한 이해 2013. 통일부
- 하태경 (2013). 뼈라에서 디도스까지-북한 대남 사이버테러의 현재와 미래, 서울: 글동

2. 국외문헌

- Gavan McCormack (2004). 범죄국가, 북한 그리고 미국(박성준 역), 서울: 이카루스미디어(원전은 2004년에 출판)
- George B. Vold (1958). Theoretical Criminolog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Jasper Becker (2005). 불량정권(김구섭·권영근 역), 서울: 도서출판 기파랑(원전은 2004년에 출판)
- Milan Svoblik (2012). The Politics of Authoritarian Rul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ichard Haass (2005). 미국 외교정책의 대반격(장성민 역), 경기: 김영사(원전은 2005년에 출판)
- Vold, Bernard, Snipes (1998). Theoretical Criminolog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3. 기타

- “군, 미사일-핵도발 가능성 예의 주시”, 동아일보, 2013년 12월 13일 게재
- “군복 대신 양복…최룡해 당비서로 좌천”, 동아일보, 2014년 5월 6일 게재
- “군, 북한 사이버 요원 급속히 확대…6천명 규모”, 이투데이, 2014년 2월 13일 게재
- “‘김정은과 인연’ 北 고위인사들 승승장구”, 연합뉴스, 2014년 4월 28일 게재
- “김정은, 북한군에 공격태세 갖춰라 지령”, 국민일보 쿠키 뉴스, 2010년 12월 1일 게재
-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제2연평해전”, 2012년 6월 28일 게재
(http://www.kdvo.or.kr/html/community/view_01.php?gubun=brd_comm_03&no=4633)
- “북, 사이버 테러 요원 어떻게 양성하나”, 열린북한방송, 2011년 5월 28일 게재
- “북의 대남 사이버테러, 디도스 등 총 6화”, 이데일리, 2013년 10월 15일 게재
- 이준운, “박남기 좌천, 군부와의 파워 게임에서 밀린 것”, 열린북한방송, 2010년 2월 8일
게재
- 좋은 벗들, “군부 산하 외화벌이 회사 축소”, 오늘의 북한 소식 제112호, 2008년 2월 22일
게재
- 헤럴드경제, “미, 북 7년째 테러지원국 제외”, 헤럴드경제 뉴스, 2014년 5월 1일 게재

【Abstract】

The Changing Aspects of North Korea's Terror Crimes and Countermeasures : Focused on Power Conflict of High Ranking Officials after Kim Jong-IL Era

Byoun, Chan-Ho · Kim, Eun-Jung

Since North Korea has used terror crime as a means of unification under communism against South Korea, South Korea has been much damaged until now. And the occurrence possibility of terror crime by North Korean authority is now higher than any other time. The North Korean terror crimes of Kim Il Sung era had been committed by the dictator's instruction with the object of securing governing fund. However, looking at the terror crimes committed for decades during Kim Jung Il authority, it is revealed that these terror crimes are expressed as a criminal behavior because of the conflict to accomplish the power and economic advantage non powerful groups target. This study focused on the power conflict in various causes of terror crimes by applying George B. Vold(1958)'s theory which explained power conflict between groups became a factor of crime, and found the aspect by ages of terror crime behavior by North Korean authority and responding plan to future North Korean terror crime.

North Korean authority high-ranking officials were the Labor Party focusing on Juche Idea for decades in Kim Il Sung time. Afterwards, high-ranking officials were formed focusing on military authorities following Military First Policy at the beginning of Kim Jung Il authority, rapid power change has been done for recent 10 years. To arrange the aspect by times of terror crime following this power change, alienated party executives following the support of positive military first authority by Kim Jung Il after 1995 could not object to forcible terror crime behavior of military authority, and 1st, 2nd Yeongpyeong maritime war which happened this time was propelled by military first authority to show the power of military authority. After 2006, conservative party union enforced censorship and inspection

on the trade business and foreign currency-earning of military authority while executing drastic purge. The shooting on Keumkangsan tourists that happened this time was a forcible terror crime by military authority following the pressure of conservative party.

After October, 2008, first military reign union executed the launch of Gwanmyungsung No.2 long-range missile, second nuclear test, Daechung marine war, and Cheonanham attacking terror in order to highlight the importance and role of military authority. After September 2010, new reign union went through severe competition between new military authority and new mainstream and new military authority at this time executed highly professionalized terror crime such as cyber/electronic terror unlike past military authority. After July 2012, ICBM test launch, third nuclear test, cyber terror on Cheongwadae homepage of new mainstream association was the intention of Km Jung Eun to display his ability and check and adjust the power of party/military/cabinet/ public security organ, and he can attempt the unexpected terror crime in the future.

North Korean terror crime has continued since 1980s when Kim Jung Il's power succession was carried out, and the power aspect by times has rapidly changed since 1994 when Kim Il Sung died and the terror crime became intense following the power combat between high-ranking officials and power conflict for right robbery. Now South Korea should install the specialized department which synthesizes and analyzes the information on North Korean high-ranking officials and reinforce the comprehensive information-collecting system through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North Korean defectors and secret agents in order to determine the cause of North Korean terror crime and respond to it. And South Korea should participate positively in the international collaboration related to North Korean terror and make direct efforts to attract the international agreement to build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the response to North Korean terror crime. Also, we should try more to arrange the realistic countermeasure against North Korean cyber/electronic terror which was more diversified with the expertise terror escaping from existing forcible terror through enactment/revision of law related to cyber terror crime, organizing relevant institute and budget, training professional manpower, and technical development.

Key words : North Korea, Terror Crime, High-Ranking Officials,
Power Conflict, Terror Countermeasure